

한중경제포럼

제23-03호 2023년 8월 16일

2023년 상반기 중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023년 제3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2023년 상반기 중국경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2. 일 시: 2023. 7. 25(화) 14:00~16:30
3. 발표자: 국가신식중심 주바오량(祝宝良) 수석이코노미스트

1. 2023년 상반기 중국경제 발전 현황

- 2020년~22년 코로나19는 공급과 수요 양 측면 모두 경제적 충격을 주었음.
 - GDP 잠재성장률이 2019년 6% 내외에서 2022년 5.4% 내외로 하락함.
 - 잠재성장률은 앞으로 매년 0.2%p 내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함.
 - 2020~22년, 중국의 3년간 평균 GDP 성장률은 4.5%로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 간에 여전히 갭이 존재
 - 세계의 3년간 평균 GDP 성장률은 2.2%로 추정됨(2020년 -3.1%, 2021년 6.2%, 2022년 3.4%).
 - 2020~22년, 내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출이 경제성장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함.
 - 지난 3년간 평균 GDP 성장률에 대해 소비, 자본형성, 순수출이 각각 2.1%p, 1.5%p, 0.9%p 견인함.
 - 2020~22년, 실제 GDP 성장률 하락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0.8%p,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부동산 규제, 교육 쌍감(双减, 사교육비와 숙제의 부담 줄이기), 전력 공급제한 등의 영향은 0.3%p임.

그림 1. 2020~22년 주요 경제 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1분기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GDP	2.2	8.4	3.0	4.8	0.4	3.9	2.9
1차산업	3.1	7.1	4.1	6.0	4.4	3.4	4.0
2차산업	2.5	8.7	3.8	5.8	0.9	5.2	3.4
3차산업	1.9	8.5	2.3	4.0	-0.4	3.2	2.3
공업부가가치	2.8	9.6	3.6	6.5	0.7	4.8	2.7
서비스 생산	0.0	13.1	-0.1	2.5	-3.3	1.2	-0.9
고정자산투자	2.9	4.9	5.1	9.3	4.2	5.5	4.6
인프라투자	0.7	0.0	9.4	8.5	6.7	10.6	11.6
제조업투자	-2.2	13.5	9.1	15.6	8.1	9.6	6.8
부동산투자	7.0	4.4	-10.0	0.7	-9.1	-12.7	-15.7
사회소비재	-3.9	12.5	-0.2	3.3	-4.6	3.5	-2.7
수출(달러)	3.6	29.9	7.0	15.8	12.7	9.5	-7.0
수입(달러)	-1.1	30.4	1.1	9.6	1.7	1.0	-7.1

그림 2. 연도별 누적 GDP 갭(2019~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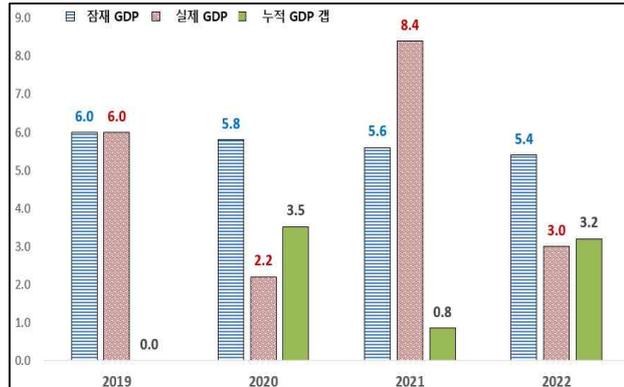


표 1. 3대 수요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p)

	소비	자본 형성	순수출	GDP
2019	3.5	1.7	0.7	6.0
2020	-0.2	1.8	0.6	2.2
2021	5.5	1.2	1.7	8.4
2022	1.0	1.5	0.5	3.0
2022.Q1	3.3	1.3	0.2	4.8
2022.Q2	-0.9	0.3	1.1	0.4
2022.Q3	2.0	0.8	1.1	3.9
2022.Q4	0.2	3.9	-1.2	2.9
2023.Q1	3.0	1.6	-0.1	4.5

□ 2023년 중국경제는 회복단계에 들어서서 1~2월에는 경제 상황이 예상을 웃돌았으나, 3월부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었다가 5~6월에 안정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내생동력은 부족한 상황

- 2022년 12월 7일 코로나19 방역정책과 관련해 “10개의 새로운 조치”(新十条)가 발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제로코로나에서 중증 방지로 완화됨.
 - 이후 발열로 진료받은 인원이 2022년 12월 23일에 피크에 도달했다가 2023년 1월 17일에 2022년 12월 7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40일간을 거쳐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진입함.
 - 국제 경험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의 피크타임을 경과하는데 90일 정도 걸리며, 그 후 2개월 정도의 소비 회복기가 나타남.
- 2023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4.5%, 전기대비 2.2%였고, 2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6.3%, 전기대비 0.8%였음.
- 공업생산은 2022년 3.6% 증가, 2023년 1~6월 3.8% 증가로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
 - 휴대폰과 컴퓨터 생산량이 감소
- 서비스 생산지수의 경우 2022년 0.1% 하락하고, 2023년 1~6월 8.7% 상승하여 3차 산업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

□ 소비가 가장 먼저 회복된 반면, 부동산투자는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며, 제조업투자의 증가 속도가 느림.

- 소비 활동의 정상화에 따른 소비 회복세가 종결되고 증가세가 둔화하기 시작함.
 - 2023년 상반기 실질 가처분소득과 실질 지출은 각각 5.8%, 7.6% 증가함.
 -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액은 2022년에 0.2%p 감소, 2023년 1~6월에 8.2% 증가(2년 평균 3.7% 증가)
- 투자는 2022년에 5.1% 증가하고, 2023년 1~6월에 3.8% 증가(2년 평균 5.0% 증가)
 - 부동산 투자는 2021년 9월부터 전년동월대비 역성장을 시작해 2022년에 10.0% 감소하고, 2023년 1~6월에 7.8% 감소함.
 - 인프라투자는 2022년에 9.4% 증가하였고, 2023년 1~6월에 7.2% 증가(2년 평균 7.2% 증가)
 - 제조업투자는 2022년에 9.1% 증가하였고, 2023년 1~6월에 6.0% 증가(2년 평균 8.2% 증가)
- 수출입 증가율이 하락함.
 - 2022년 수출액은 7.0% 증가하고 수출 물량이 1.7% 감소하였으며, 수입액은 1.1% 증가하고 수입 물량이 7% 감소함. 무역 흑자는 29.7% 증가함.
 - 2023년 1~6월에 수출액과 수입액이 각각 3.2%, 6.7% 감소하였고, 무역 흑자는 6.0% 증가함.
- 공업제품 재고는 2022년 4월부터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재고소진을 시작함.

그림 3.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



그림 4.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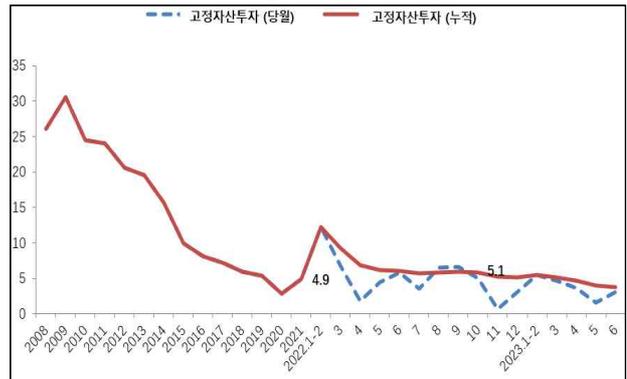


그림 5. 사회소비재 소매판매액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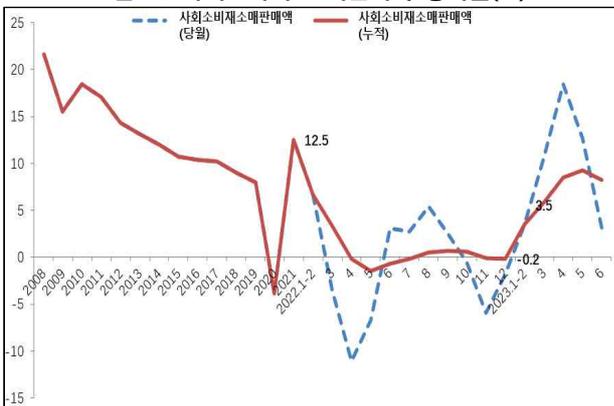


그림 6. 상품주택 재고 및 재고 소진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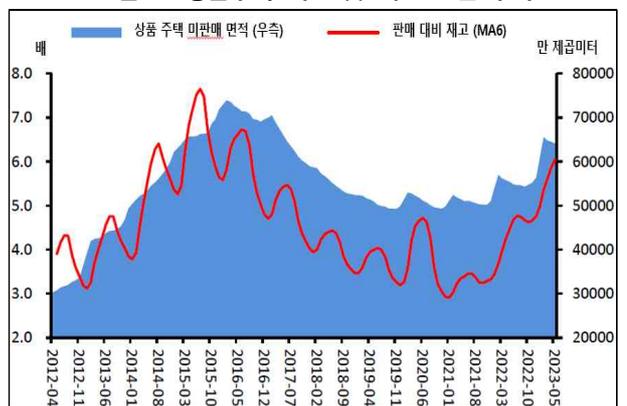


그림 7. 부동산 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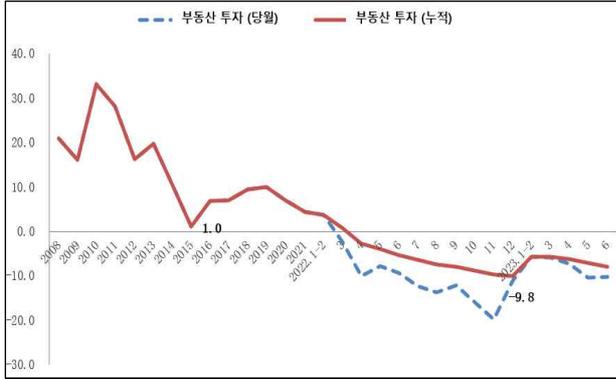


그림 8.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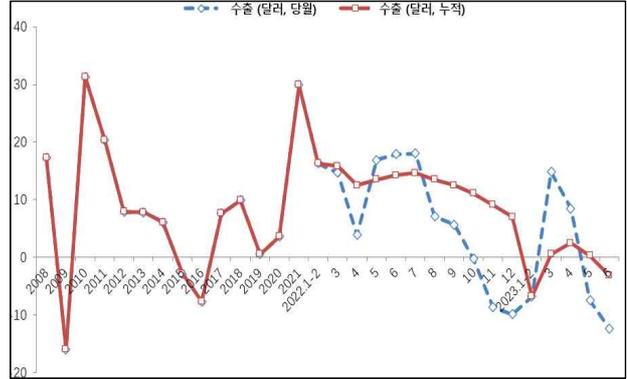


그림 9. 수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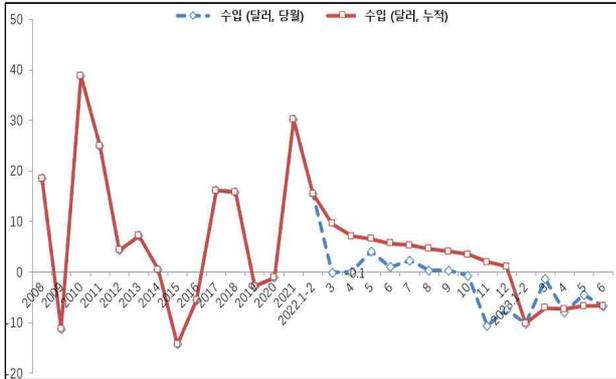


그림 10. 공업 완제품 재고 증가율(% , 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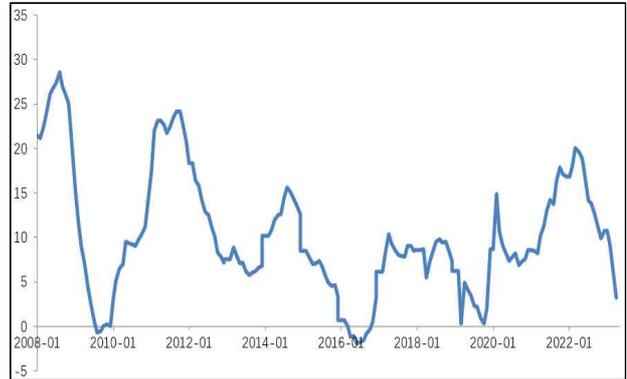


표 2. 공업 완제품 재고 주기와 PPI 변동

재고주기 (최저점-최저점)	지속기간	증가율 최고점	PPI 최저점	PPI 선행 기간
2000.05-2002.10	29개월	2001.06	1998.11	18개월 선행
2002.10-2006.05	43개월	2004.12	2002.01	9개월 선행
2006.05-2009.08	39개월	2008.08	2006.04	1개월 선행
2009.08-2013.08	48개월	2011.10	2009.08	1개월 선행
2013.08-2016.06	34개월	2014.08	2012.09	11개월 선행
2016.06-2019.11	41개월	2017.04	2015.09	9개월 선행
2019.11-	42개월	2022.04	2020.05	6개월 후행
평균치	39개월			6개월 선행

- 취업 상황은 약간 호전되었으나 청년계층 취업 압력이 비교적 큼.
 - 2022년 도시조사실업률 평균은 5.6%이며,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1,206만 명으로 2021년보다 증가 규모가 63만 명 적음.
 - 농촌이주노동자(농민공) 수는 1억 7,190만 명으로 2021년보다 28만 명 늘어났으며, 호적지에 거주하고 있는 농

민공 수는 1억 2,372만 명으로 2021년보다 293만 명 늘어남.

- 2023년 1~6월의 도시조사실업률 평균은 5.3%임.
- 6월 조사실업률은 5.2%이며, 그중 16~24세의 실업률은 21.3%임.
- 상반기 농촌이주노동자 수는 1억 8,705만 명으로 3.2% 늘어남.
- 소비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하고, 공업제품 가격은 하락함.
 -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 상승, 근원 CPI는 0.9% 상승함. 2023년 1~6월 CPI는 0.7% 상승하였고 전기대비 연속 5개월 하락함. 근원 CPI는 0.7% 상승함.
 - 2022년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대비 4.1% 상승, 그중 4분기에는 -1.1%로 하락함. 2023년 1~6월 PPI는 -3.1% 하락하였고 전기대비 연속 7개월 마이너스 성장 혹은 제로 성장을 기록함.
 - 판매액과 판매면적으로 계산한 상품주택 가격은 2022년 2.0% 하락하였고, 2023년 1~6월 6.8% 상승함.
 - 2022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은 각각 12.4%, 12.1% 상승함. 2023년 1~5월 수출가격은 6.1% 상승하고 수입가격은 1.0% 하락함. 무역조건이 개선됨.
 - 수요 부족, 생산설비 가동률 하락, 수입가격 하락, 시장주체의 자신감 부족, 디플레이션의 잠재 위험이 있음.
-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두 차례의 물가 하락과 수요 부족은 구조적 문제와 연관이 있음.
 - [1997~2012년] 1998년 2월~2000년 4월, 2001년 9월~2002년 12월에 CPI가 39개월 하락하였고 최저 -2.2%를 기록함; PPI는 1997년 6월~1999년 12월, 2001년 4월~2022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하였고 최저 -5.7%를 기록함. 주요 원인으로는 아시아 금융위기, 경방직공업 생산과잉, 국유기업의 낮은 이윤 등이 있었는데, 완화된 재정·통화정책 지속, 국유기업 개혁, 부동산 개혁, WTO 가입 등을 통해 해결함.
 - [2012년~2016년] 2012년 3월~2016년 6월에 PPI가 54개월 하락하였고 최저 -5.9%를 기록함. CPI는 플러스 성장을 달성해 2.0% 내외 수준을 기록함. 중화학공업에 생산과잉이 나타나고, 공급구조 조정 특히 서비스업의 조정이 느렸음. 2015년 12월 공급측 구조개혁을 실행함.

그림 11. CPI 및 P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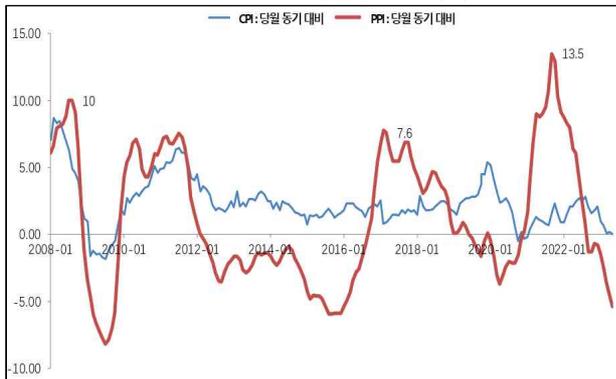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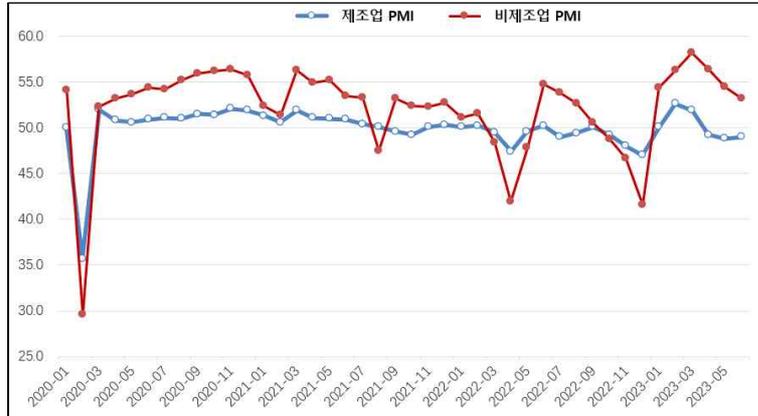


그림 12. 상품주택 가격 및 판매면적 증가율(%)



- PMI 등 경제 선행지표가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함.
 - 2023년 1~6월 종합 PMI 지표는 50 이상임. 그러나 3월부터 제조업 PMI가 하락하고, 4월부터 서비스업 PMI가 하락함.
 - 통화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완화됨. 6월 말 총통화(M2) 증가율과 사회용자 증가율이 각각 11.3%, 9.0%를 기록함. 물가요인을 고려하면 실제 용자비용이 상승함.

그림 13. 제조업/비제조업 PMI 추이



2. 경제발전에 존재하는 문제

□ 현재 중국경제가 직면해 있는 주요 문제는 수요 부족이며, 디플레이션 잠재 위험이 있음.

- 코로나19의 상흔(疤痕) 효과(scarring effect)로 낙관적 정신과 리스크 부담 의지 타격, 인적자본 유실, 채무 증가, 자산부채표 파괴, 줌비기업 청산의 어려움 등 문제들이 있음.
- 소비 수요가 여전히 부족함.
 - 청년계층 취업압력이 증대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 중간소득계층 소득 증가율이 1인당 평균소득 증가율보다 완만함.
 - 저축율이 상승하고 대출수요가 감소함.
 - 2023년 상반기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0.648로 2019년 상반기 0.675와 2021년 상반기 0.65보다 낮은 수준임.
 - 농촌주민의 소비성향은 0.81로 2019년 상반기 0.811에 거의 근접한 수준임.
- 부동산시장이 여전히 부진함
 - 판매 부진 → 자금 회수 어려움 → 용자 어려움 → 토지 분양 의지 결핍 → 신규 준공 감소 → 투자 감소의 사이클이 아직 깨지지 않고 투자가 부진하고 토지 구입 면적이 감소함.
- 제조업투자 증가율이 완만하고 설비가동률이 낮은 편임. 기업 이윤도 감소함.
 - 2023년 상반기 설비 가동률은 74.4%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1%p 낮은 수준임.
-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제무역 증가율이 하락하여 중국의 수출, 외자 이용, 대외투자에 영향을 미침.

□ 시장주체의 기대심리가 약화됨.

- 총수요가 부족함.
 - 기업 특히 중소·영세기업이 경영난에 처해있으며 코로나19의 상흔 효과가 영향을 미침.
- 생산요소와 자원의 투입구조에 변화가 나타남.

- 전통 산업의 이윤이 더욱 감소하면서 기술혁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기술의 빠른 교체로 인해 파격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음. 기업가 자질에 대한 요구도 격상됨.
- 국내 정책의 불확실성과 민영경제와 민영기업을 부정하는 여론의 등장으로 민영기업의 기대심리가 악화됨.
-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 부동산 규제, 플랫폼 독점, 디지털 안보, 교육 쌍감(双减) 등 관련 정책 규제의 영향을 받음.
- 민영기업가들이 국내 여론 환경, 재산권 보호, 생산요소 공정 이용 문제, 기업 거버넌스 구도, 정치와 비즈니스 간의 관계 등 여러 이슈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미국의 타격과 억제, 디커플링, 작은 마당·높은 장벽(小院高墙: smallyard, high-fence), 니어쇼어링 등이 일부 기업에 피해를 줌.

□ 재정·금융 리스크 압박이 증대됨.

- 중소·영세기업이 경영난에 처함에 따라 중소 금융기관이 리스크에 더욱 노출됨.
- 부동산 신용 리스크가 확대됨.
- 지방정부 음성채무 문제가 두드러짐.
 - 도시건설 특별채권(플랫폼 회사) 문제, 시장화 방식의 용자를 통한 정부 업무 추진, 기업의 매출 미수금 체불, 국유기업의 플랫폼화, 지방정부의 재정압력 증대 등 문제들이 있음.

□ 국제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큼.

- 미국은 인력,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안보 등 다양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중국의 경제 발전과 빠른 추월을 전방위적으로 억제하고자 함. 글로벌 산업체인의 외부 이전, 핵심부품 공급 중단 및 기술 제한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의 산업·공급 체인의 안보 문제가 두드러짐.
-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산업사슬의 재편: 국가와 생명 안전에 관련된 산업들이 본국으로 회귀하였고, 산업이 점차 분산화·다원화·지역화되는 특징을 보임.
- 러·우 전쟁이 에너지, 식량 등의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악화됨.
- 미국, 유로존, 영국 등 주요국들의 통화 완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출구전략이 나타나면서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
- 세계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하였으나 예상을 웃돌고 있음.
 - 국제통화기금(IMF)은 2022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3.4%로, 2023년의 세계 경제성장률을 2.8%로 전망함. 이는 2023년 1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0.1%p 하향 조정한 것임.
 - 세계 무역량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4%, 2.4% 증가함.
 - 2023년 석유가격이 70달러/배럴로 16% 정도 하락하였고, 비에너지 가격이 6% 정도 하락함.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2022년 8.8%에서 2023년 6.6%로 하락함.
 - 미국은 2023년 5월에 기준금리를 25BP 올려 5~5.25%까지 인상함. 지난 1년간 금리를 10차례 인상함. 미국경제가 실업률 하락, 인플레이션 상승, 금융 리스크 상승이라는 세 가지 선택하기 어려운 기로에 놓여있음.

- 환율, 상품가격, 자본이동(資本回流), 자본가격 조정, 수출, 해외용자, 해외자산 안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경제가 영향을 받음.
-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금융의 양방향 개방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해외 용자와 자산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함.

표 3. 세계 및 주요국 경제전망 : IMF(World Economic Outlook, 2023년 4월)

	2020	2021	2022	2023	2024
세계(PPP)	-3.1	6.2	3.4	2.8	3.0
세계(시장환율)	-3.0	6.0	3.1	2.4	2.5
선진국	-4.5	5.4	2.7	1.3	1.4
신흥개도국	-2.0	6.7	3.9	3.9	4.2
미국	-3.4	5.9	2.1	1.6	1.1
유로존	-6.4	5.3	3.5	0.8	1.4
영국	-9.3	7.6	4.0	-0.3	1.0
일본	-4.5	2.1	1.1	1.3	1.0
중국	2.2	8.4	3.0	5.2	4.5
인도	-6.6	8.7	6.8	5.9	6.3
브라질	-3.9	6.5	2.9	0.9	1.5
러시아	-2.7	4.7	-2.1	0.7	1.3
세계 무역량	-5.0	10.4	5.4	2.4	3.4

표 4. 세계 및 주요국 경제전망 : 세계은행(Global Economic Prospects, 2023년 1월)

	2023	2024
세계	1.7	2.7
선진국	0.5	1.6
신흥개도국	3.4	4.1
미국	0.5	1.6
유로존	0.0	1.6
일본	1.2	0.7
중국	4.3	5.0
인도	6.6	6.1
브라질	0.8	2.0
세계 무역량	1.6	3.4

3. 2023년 중국 경제발전의 총체적 방향과 목표

□ 2022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2023년 주요 경제업무로 수요 부족, 공급 충격, 기대심리 약화의 삼중고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개의 주요 노선을 확정함.

- 내수확대 전략과 공급측 구조개혁을 결부시켜 발전·취업·물가 안정 업무를 잘 수행하고 중대 리스크를 효과

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경제 운행의 전반적 호전을 이끌고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실현 하도록 함.

- 시장의 자신감을 크게 진작시킴.
- 발전과 안보를 총괄함.

□ 경제·사회 주요 발전 목표

-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내외, 도시 신규 취업자 수 1,200만 명 내외, 도시 조사실업률 5.5% 내외, 소비자물가(CPI) 3% 내외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잠재 GDP 성장률, 실제 가능성 및 취업 수요, 중국 중장기 발전 목표 등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함.

□ 거시경제 정책이 시장주체 보장에서 수요 견인으로 전환됨.

- 2020년 4월 코로나19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취업 △기본 민생 △시장주체 △식량·에너지 안보 △산업망·공급망 안정 △기층조직 운행 등 “6개 보장”(六保) 임무를 제기함.
- 공급측 개혁을 주요 노선으로 하여 2018년 5월에 부가가치세 개혁을 실시하고 7월에 개인소득세 개혁(개인 소득세 징수기준 상향 조정, 6개 세금공제 항목 추가)과 영세기업 우대정책 등을 실시함.
 - 2018년~21년 매년 감세 규모가 각각 1.3조 위안, 2.36조 위안, 2.5조 위안, 1.1조 위안에 달함. 2022년 세금 감면·환급 규모는 4.2조 위안에 달함.
- 2020년부터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실시함.
 - 2020년 방역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 위안, 광의 재정적자율은 8.4%(일반 적자율 3.6%, 특별채권 3.75조 위안 발행), 정부 일반지출 증가율은 2.8%임.
 - 2021년 광의 재정적자율은 6.4%(일반 적자율 3.2%, 특별채권 3.65조 위안 발행), 정부 일반지출 증가율은 0.3%임.
 - 2022년 재정적자 규모는 2천억 위안 감소한 3.37조 위안, 재정적자율은 2.8%,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는 3.65조 위안임. 특정기관 납부 금액은 1.81조 위안이고, 일반예산지출 실제 증가율은 6.1%이며 정책성 은행의 개발금융 수단 7,500억 설립함. 지방정부 특별채권 사용한도는 5천억 위안임. (2022년 5월 23일 국무원 상무 회의에서 6개 방면, 33개 항목의 구간조정 조치를 발표하고, 8월 24일에 19개 조항이 추가 발표됨.)
- 2020~22년 세금 감면·비용(수수료) 인하·시장주체 보장이 효과를 거둠. 그러나 2022년 GDP 대비 조세 수입과 일반 예산수입 비중이 각각 13.8%, 16.8% 감소함.
 - 중소기업 청산 완만, 산업구조 고도화 어려움, 청년 취업 압력 등 문제들이 존재함.

□ 2023년 1분기 정치국회의의 경제 형세에 대한 판단과 요구

-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통제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두고 경제·사회의 일상적 운영을 전면적으로 회복하였으며, 수요 위축·공급 충격·기대심리 약화의 3중 압력이 완화되고, 경제성장이 예상을 웃돌고 있으며, 시장수

요가 점차 회복되고 경제발전이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며, 순조로운 경제 운영을 달성함.

-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 운영의 호전 추세는 주로 회복적인 것이며, 내생동력이 강하지 않고 여전히 수요가 부족함. 경제 전환·고도화가 새로운 장애요인에 직면해 있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해야 함.
-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여 정책 효과 발휘와 경영주체 활력 촉진을 결부시켜 고품질 발전을 위한 강대한 동력을 창출하고 경제 운영의 지속적 호전, 내생동력의 지속적 향상, 사회 기대심리의 지속적 개선, 리스크 지속적 해소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함. 발전 기세를 몰아 경제의 효과적인 질적 발전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추진해야 함.

4. 2023년 거시경제 정책 방향

□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효율성을 향상시킴.

- 재정적자율을 2022년 2.8% 내외에서 3%로 확대,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규모를 3.8조 위안으로 늘려 사용 범위를 적당히 확대(2023년 일반공공예산 증가율 6.7%, 2022년 이월수입이 5,500억 위안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2023년 일반예산지출 증가율이 5.6%로 2022년 실제 지출 6.1%보다 낮은 수준임; 지방정부 기금예산 증가율 0.4%)
- 세금 감면·비용(수수료) 인하 정책과 세금 환급·연장납부 정책을 개선함.
- 정부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음. 재정 이자 할인 등 방법을 통해 인프라건설, 기술개선 투자, 핵심기술 돌파 등을 지원하고 재정 자금이 사랑발천근(四两拨千斤)¹⁾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 중앙재정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지출을 확대하고 기층조직의 “3개의 보장”(기본민생 보장, 임금 보장, 운행 보장) 업무를 확실하게 실행함.

□ 온건한 통화정책은 정확하고 강력하게 실행함.

- 통화 공급량과 사회용자 규모의 증가 속도는 경제성장률과 안정적·합리적 물가 수준에 부합하도록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확대함.
- 통화정책 수단의 총량과 구조, 이중 기능을 확실하게 발휘함. 재정정책과 조합하여 금융기관이 소형·영세 기업, 녹색발전, 과학기술 혁신 등 중점 분야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도록 유도함.
- 기업의 종합 융자비용과 개인 신용대출 비용의 안정적 인하를 추진함.
- 통화정책은 국내경제 안정을 위주로 하며, 위안화는 합리적·균형적 수준에서 기본적 안정을 유지함.
- 정책성 은행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용자를 확대함.

1) 四两拨千斤: 4량으로 천근의 무게를 다스린다는 의미로, 방법만 좋으면 작은 것으로 큰 성과를 얻는다는 뜻임.

□ 내수 확대에 주력하여, 소비의 기초 역할, 투자의 관건 역할, 수출의 반침대 역할을 발휘하도록 함.

- [소비] 소비의 회복·확대를 우선순위로 함.
 -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 신용대출을 합리적으로 확대함.
 - 주택과 신에너지 자동차 소비와 양로 서비스, 교육·의료·문화·스포츠 등 서비스 소비를 지원함.
- [투자] “14·5” 계획의 중대 프로젝트 건설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핵심기술 공략 프로젝트 투자를 가속 추진하며, 제조업 기술 개조 투자를 지원하고, 사회·민생·환경보호 등 분야의 건설을 강화함.
- [수출입]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와 해외 창고 등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의 발전을 지원하고, 선진 기술 설비, 에너지자원, 부족한 농산품의 수입을 확대함.

□ 현대화 산업시스템의 구축을 강화함.

- 기반 산업의 발전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광물 등 산업의 발전과 비축을 보장함.
- 산업망·공급망 안정을 보장하고 기술 공략을 강화함.
 - 집적회로, 전자부품, 고급 NC선반 등에 중점을 두고 설비 투자와 R&D 투자를 확대함.
 - 산업인터넷 플랫폼, 제조업 전환·고도화에 절실하게 필요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
 - 범용 인공지능의 발전을 중시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며, 리스크 방지를 중시함.
- 전통 산업의 녹색·저탄소 발전을 촉진함.
 - 신에너지 자동차의 발전 우위를 확보 및 확대하고, 충전기와 에너지 저장 등 인프라건설 및 관련 전력망 개조를 가속 추진함.

□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민영·외자 기업의 투자를 장려함.

- “두 가지 동요하지 않음(两个毫不动摇)”²⁾ 원칙을 견지하고 민영기업의 규모화 발전을 지원함.
 - 경쟁, 생산요소 사용, 재산권 보호 등에서 모든 소유제 기업에 대해 동등 대우함.
 - 기업의 매출 미수금 문제를 해결함.
-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현재 시장의 기대심리를 안정시키는 최우선 업무임.
 - 플랫폼 기업의 규범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플랫폼 선두기업의 혁신을 장려함.
-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여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하고 높은 표준의 국제경제무역 규범에 맞춰 개혁개방의 선행 시험을 추진함.

□ 부동산 리스크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등 중대 경제·금융 리스크를 방지·해소함.

- [부동산 리스크 방지] “주택은 주거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함.

2) 两个毫不动摇: 공유제 경제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공고화하고 발전시키며,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장려·지원·유도한다는 의미임.

- 도시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거주 수요와 개선형 주택 수요를 지원하고, 주택인도보장·민생보장·안정보장 업무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함.
- 초대·특대(超大特大) 도시에서 “성중촌(城中村)³⁾ 개조와 “일상 운영과 비상 대응 능력 결합”(平急两用)의 공공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점진적으로 추진함.
- 계약금 인하, 구매 제한 완화, 세금 감면, 대출 기록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으면 생애 첫 주택으로 인정하는 정책(认房不认贷), 정부 구매 등 부동산 안정 정책을 실시함.
-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해소] 음성부채와 법정부채를 총괄적으로 감독·관리하고, 변형채무 발생을 금지하며, 국유기업의 플랫폼화를 방지함.

5. 2023년 경제 형세 전망

- 2023년 GDP 성장률이 전저·중고·후안정(前低中高后稳)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2023년 3분기, 4분기, 연간 GDP 성장률은 각각 4.5%, 5.0%, 5.2% 내외로 예상함.
 - [코로나19 방역 통제 최적화 효과] 상품과 서비스 소비가 반등한 후 소비가 점차 일상 수준으로 회복, 소득과 소비성향에 의해 결정되는 내생성장 단계에 진입함.
 - [거시정책의 중첩 효과] 인프라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부동산 투자는 하락폭이 감소함.
 - [2022년의 낮은 기저효과] 기저효과가 2023년 GDP 성장률을 1.5%p 전인할 수 있음.
- 2023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수요 측면에서는 서비스소비의 반등, 공급 측면에서는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음.
 - [수요측 요인 전망] 소비 특히 서비스소비의 반등, 인프라투자 안정, 제조업투자 및 부동산투자의 하락세 완화, 기타 서비스투자 상승; 하반기 내 재고 저점 확인, 수출 증가속도 감소 및 수입 소폭 상승 등이 있음.
 - [공급측 요인 전망] 제조업 소폭 상승, 경방직공업 호전, 수출을 위주로 하는 전자기기 산업 안정, 전략적 신흥산업 성장. 서비스업 반등 등이 있음.
 - 물가가 안정적인 수준이고, 외부 유입 인플레이션 압력이 감소함. 동시에 디플레이션의 잠재 위험도 있음.
 - 서비스가격 상승, 공업소비재와 농산물 압력은 그리 크지 않음.
 - 2022년 이월효과가 2023년 CPI와 PPI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0.27%p, -1.23%p임.

3) 城中村: 도시 내 낙후지역

표 5.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망

지표	2021년		2022년		2023년 예측치	
	억 원	%	억 원	%	억 원	%
GDP	1,149,237	8.4	1,210,207	3.0	1,264,700	5.2
1차 산업	83,217	7.1	88,345	4.1	91,600	3.5
2차 산업	451,544	8.7	483,164	3.8	493,500	4.3
3차 산업	614,476	8.5	638,698	2.3	679,600	6.2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	-	9.6		3.6		4.2
도시 고정자산투자	544,547	4.9	572,138	5.1	595,000	4.0
부동산투자	147,602	4.4	130,000	-10.0	123,500	-5.0
소비재 소매판매총액	440,832	12.5	439,733	-0.2	474,900	8.0
수출 (달러)	33,639.6	29.9	35,936	7.0	34,860	-3.0
수입 (달러)	26,875.3	30.1	27,160	1.1	25,260	-7.0
CPI		0.9		2.0		0.6
PPI		8.1		4.1		-3.0

질의응답(Q&A):

Q 1. 어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정책 방향을 설명했는데 회의 결과가 금일 발표 내용 중 향후 경제전망 부분의 내용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발표내용 중에 부동산시장이 계속해서 가장 증점적으로 지켜봐야 할 리스크 요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회의내용을 봤을 때 시장의 이해로는 오히려 경제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렇게 될 경우 리스크가 더욱 커질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1. 우선 저의 발표자료는 어제 중앙정치국회의가 열리기 전에 작성되었음. 국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발표된 후 몇 개월 정도 지나야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기간은 보통 재정정책은 3개월, 통화정책은 9개월 정도 걸림.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어도 그 해 경제전망을 크게 조정하지는 않음. 이번에 발표된 정책은 주로 내년 상반기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임. 물론 일부 영향은 바로 나타나는 것들도 있음. 예를 들어 주식가격이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주식가격의 상승은 자산효과(財富效果)를 의미하고 많은 젊은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날 바로 소비를 하게 됨. 정치국회의의 내용이 우리의 예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보통은 그 내용에 따라 전망을 큰 폭으로 조정하지는 않음. 그리고 혹자들은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재차 폭등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현재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일선도시와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등 일부 이선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하락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지금도 여전히 추첨제를 통해 주택구매를 진행하는 도시도 있다고 함. 올해 1분기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예전과 같이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열린 2분기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더 이상 이 원칙을 제기하지 않았고 대신에 "중국 부동산의 수급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새로운 판단을 내림. 이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의 범위가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내린 판단에 동의하며, 중국 부동산의 수급관계에 확실히 큰 변화가 있으며,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만약 일부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2022년에 제안되었던 부동산세를 그러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행할 수 있음. 우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거기에 맞는 후속 조치들을 실행하면 됨. 중국 부동산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Q 2. 이번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강조했는데 부동산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다뤄야 함. 현재 중국이 도시 신주민을 위한 보장형 주택을 강조하고 있고 그중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보장형 임대주택인데 "14·5" 계획 기간에 건설 계획인 보장형 임대주택 수는 전국에 800만 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알고 있음. 발표 중에恒大(恒大)의 판매되지 않은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 보장형 주택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 신주민이나 청년층이 그런 주택을 구입하기에는 주택면적도 크고 가격도 비싸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함. 그렇다면 도시 신주민, 청년층, 타지역으로 이주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A 2. 이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모델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함.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동산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은 시장화 모델, 싱가포르는 보장형 모델이라고 생각함. 중국은 도시 주택 중에 면적이 70~90㎡ 되는 보장형 주택이 20% 정도 있어야 한다는 지표 요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누적된 보장형 주택 수가 4,000만 채 이상임. 앞으로 3억 명에 달하는 도시 신주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3억 명 중에 농민공 수가 1.7억 명 정도, 도시 간 이동 인원수가 1억 명 이상 되며 그 외 대학 졸업생도 있음. 도시 신주민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째, 일부 일선도시와 이선도시에서 보장형 주택을 대규모로 건설하고 보장형 주택의 비율을 늘리는 것임. 선전(深圳)은 현재 보장형 주택 비중이 50% 이상으로 늘어났음. 둘째, 정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보장형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음. 셋째, 정부와 개인이 재산권을 공유하는 공유재산권 주택이 있음. 공유재산권 주택은 일반 주택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여 주택 구매 여건은 되지만 소득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들이 구입할 수 있음. 공유재산권 주택은 베이징(北京)에서 많이 볼 수 있음. 제가 봤을 때 이 방법은 싱가포르 모델을 참고한 것임. 도시 신주민들에게 주택을 장기적으로 임대하다가 입주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판매하는 방법도 있음. 보장형 주택의 공급에 있어 정부가 건설하는 주택도 있고 정부가 부동산 기업으로부터 인수한 상품주택도 있을 수 있음. 정부가 상품주택을 인수할 때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작은 면적의 소형주택만 인수할 수 있음. 그리고 면적이 큰 주택은 공동 임대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예전에 호주에 산업시찰을 갔을 때 상품주택 단지 안에 소형주택 몇 채만 정부가 인수하여 보장형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기업의 도산·재편을 통해 우수한 부동산 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타 기업의 상품주택을 사들이는 방법도 있음. 그리고 선전(深圳) 같은 경우는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주택이 20% 정도 있음. 이런 인재를 위한 주택은 대부분 면적이 큰 주택이며 장기임대나 구입이 모두 가능함. 제가 알기로 지난(濟南), 정저우(鄭州) 등 도시들에서 이미 시범적으로 정부가 보장형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품주택을 구입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 중앙은행이 국유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여 보장형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도와주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있을 수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주택 인수를 담당하는 국유기업이 나중에 미국의 프레디맥(Freddie Mac), 페니메(Fannie Mae)나 일본의 도시재생기구(UR)와 같은 중국의 주택경영기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함.

Q 3. 2019년에 LPR을 발표한 이후로 코로나19 초기 2년 정도를 제외하면 금리가 주기적·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그리고 은행의 각종 예금상품도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빠진 예금들이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현재 시점에서 금리인하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현상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앞으로 저금리 기조가 어느 정도 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A 3. 현재 중국경제는 하방 단계에 처해 있음. 그리고 현재 중국의 CPI와 PPI가 상승폭이 미미하여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음. 이런 추세로 볼 때 올해 내지 내년까지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내년 상반기에 중국경제가 안정 추세에 접어들고 CPI와 PPI가 모두 안정적인 구간에 들어선다면 그에 따라서 금리도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함. 제가 봤을 때 내년 안에 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LPR 금리가 하락하는 속도가 시장기대에 비해 더딘 편임. 그 주요 원인은 중국의 은행들이 주민예금금리를 낮추기 매우 어렵기 때문임.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빨리 떨어진다

면 은행의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임. 이것이 바로 중국의 금리가 인하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린 원인임. 만약 은행이 주민예금금리를 인하한다면 많은 사람이 단기예금을 장기예금으로 바꿀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장기예금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의 원가비용이 더 상승하게 됨. 그래서 현재는 금리를 천천히 인하하고 있는 상황임.

Q 4. 오늘 발표 중에 향후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리스크 중의 하나가 지방정부 부채라고 말씀하셨음. 지방정부 부채가 문제가 되면 그만큼 재정정책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재정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음. 최근 데이터를 보니 토지출양을 통한 지방정부 수입 증가율이 -20%가 넘고 있음. 지방정부에 있어 토지 재정이 손쉽게 재정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수단이었을 텐데 이러한 부진한 증가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것이 중국정부의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부채축소(디레버리징) 경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토지출양이 줄어든 영향인 건지?

A 4. 지방정부의 부채는 일반적으로 토지출양금을 통해 상환해 왔음. 지방정부의 토지출양금이 작년에 30% 정도 줄어들었고 올해는 20%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부채가 상승하고 있음. 토지출양금이 줄어든 것은 주로 부동산 요인에 기인된 것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중국의 부동산 수급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고 앞으로 부동산의 수요량이 0에 달한다면 매우 양호한 상황일 것임. 따라서 토지출양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임. 향후 지방정부의 음성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다를 것임. 중국의 GDP 대비 전체 부채 비중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며 일본, 미국, 유럽보다 모두 낮은 수준임. 우리는 부채 문제를 논할 때 부채 총량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주로 지방정부의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기본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현재 광둥(广东), 장쑤(江苏),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 등 지역은 이미 음성채무가 없음. 그러나 톈진(天津)과 구이저우(贵州)는 아직 부채 규모가 상당함. 앞으로 중국이 부채 해소 종합 정책(化债一揽子政策)을 실행할 텐데 그 배후에는 중국 재정·조세 제도의 이전지급 문제와 지방의 세금 출처 문제가 있음. 현재 중국의 소비세 등 세금은 주로 온라인 쇼핑과 플랫폼 기업이 발달한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등 지역으로 흘러가고 있음. 소비세는 지방세인데 현재 많은 지역이 소비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지방채무를 지방정부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되며 중앙정부의 이전지급을 통해 소비세 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Q 5. 전반적인 실업률이 5.2%로 정부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5.5% 이내로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음. 다만 청년실업률이 6월 발표치에 따르면 22.3%, 25세 이상 실업률은 4.2%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렇게 상반된 수치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청년실업률이 높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지?

A 5. 현재 청년 취업압력이 비교적 큰데 그중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주기적인 문제도 있음. 구조적인 문제라면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에서 플랫폼 기업, 교육, 부동산, 금융 등 부문에 대해 관리, 규제 또는 축소를 실행해 온 것임. 이 분야들은 모두 대학 졸업생들이 주로 취업하는 분야임. 예를 들어 민영 교육산업이 원래는 보통 1,20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번 관리를 거친 후 몇백만 명 정도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음. 이렇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주로 대학 졸업생을 포함한 청년층임. 주기적인 문제는 경제회복이 느리고 부동산이나 보험 등 서비스업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임. 부동산이나 보험 판매직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 졸업생임. 보험 분야만 해도 원래는 일자리가 100만 개 정도 됨. 이에 비해 농민공 취업은 양호한 편임. 현재 요식업, 숙박, 관광 등 분야의 회복이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이런 분야는 모두 농민공들이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임. 그렇기 때문에 대학 졸업생들이 취직할 수 있는 관광, 교육, 스포츠 등 현대 고급서비스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야 함.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도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적당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정부가 일부 산업의 기업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이 인턴 직원을 채용하게 하는 방법도 있음. 청년실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함. 요즘은 많은 대학 졸업생들이 배달 일을 하고있는 상황임.